

한·중·일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더 많은 투자 기회”

문 대통령, 비즈니스 서밋서 ‘혁신 성장’ 강조 “세계경제 어려우나 한중일이 경제질서 주도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반도에 평화 정착된다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경제 증진의 새로운 기회를 평가하며 “3국 경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국 협력의 주역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세계시장을 향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우리 3국과 동아시아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3국간의

공고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면서 “3국 경제인 여러분이 함께 채택한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다행인 것은 3국간의 교역이 지난해부터 호조를 보이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유교의 고전 ‘맹자(孟子)에 우환이 있는 곳에서는 살고, 안락한 곳에서는 죽는다’는 말이 있다”며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 한중일 3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3국이 협력해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더 포용

적이고 더 혁신적인 성장 방식을 찾아낸다면,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한중일 FTA 빠른 진전 등 역내 경제협력 지평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에너지·환경 분야 등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구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3국은 그동안 경제인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제 성장을 넘어서서 3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에너지, 환경, 보건 의료, 재난대응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3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시작된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확

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 분야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세계 역화 천연가스(LNG) 최대 수요자인 한중일 협력, 2018 평창동계올림픽·2020 도쿄하계올림픽·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무대로 한 인적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3국 경제인사들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기업인 우의 증진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차 한중일 정상회의 때부터 부대행사로 열려왔다.

이날 서밋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민 GS 부회장, 구자열 IS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조용병 신한금융투자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모토이카사카 총리관에서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화협정, 전쟁당사자 간 합의”

문 대통령 “동북아 안전 보장 논의 참여” 아베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동북아 안전 보장 논의에 일본이 참여하고 싶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오찬 회담에서 이렇게 말한 뒤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주체

가 돼야 한다는 ‘4·27 판문점 선언’을 강조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의 일본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 시각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을 거론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지역 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뉴스

한중 “北 비핵화 시 체제 보장”

“경제 지원에 국제사회 동참해야”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9일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방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

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고, 한·중 간의 조사연구 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보상의 의미에 대해 “그 부분은 ‘비핵화가 이뤄진다면’이라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얘기”라며 “거기에 따라서 국제사회도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 등에 대해 같이 동참하고 북한이 체제보장 문제 등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뉴스

폼페이오 “북·미 수십년간 敵...갈등 해결 희망”

방북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논의한 뒤 김 부위원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생선과 오리 요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을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훌륭한 파트너”로 불렀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수십년간 적이었다. 지금 우리는 이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집중하려는 북한의 정책뿐 아니라 개선된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제재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이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대북 최대 압박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성 반박

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7일 밤 늦게 워싱턴 앤드류 공군기지 에서 에어포스 757기에 탑승했고, 그 때까지 방북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핵협정 파기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몇 분 뒤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탄 비행기가 급유를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고 한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에는 브라이

언 혹은 미 국무부 선임 정책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리사 켄나 미 국무부 집행사무국 및 공공외교 담당 차관, 헤더 노이트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기지도 방북 일행에 포함됐다. 기자들에게는 출발 4시간 전에 방북 사실이 통보됐다고 한다.

에어포스 757기는 9일 아침 평양에 도착했으며, 순안공항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폼페이오 장관 등 방북단은 평양 시내에 있는 고려호텔까지 자동차로 이동했다.

폼페이오는 국무장관 지명자 시절인 지난 3월 31~4월 1일 북한을 극비 방문한 바 있다. /뉴스

실시간 검색순위 강제노출 제한

댓글정렬 시간 순으로... 정운천 의원, 법안 대표발의



여론조사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기사의 댓글정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 을) 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드루킹-김경수 의원 댓글 조작’ 논란으로 특정인의 여론조작과 포털사이트의 상업구조가 맞물리며 조작된 실시간 검색순위와 공감댓글이 이용자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일, ‘드루킹’이 지난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외에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를 추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드루킹’ 뿐만 아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많은 업체가 쏟아져 나온다. 마케팅 대행업체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검색순위 등을 조작해주는 업체들이다.

정 의원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특정 검색어를 상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슈를 다른 이슈를 통해 밀어내기도 하는 등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포털을 통해 뉴스 기사를 접하는데, 접속 하지마자 보여지는 실시간 검색순위는 조작된 여론에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에 포털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두가지 주요 골자는 실시간 검색순위의 강제노출 제한 댓글 정렬방식 직접 선택 등이 다.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론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게시된 글 또는 댓글은 기본적인 정렬기준을 시간 순서로 하되,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간 순 이외의 정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소하게는 맛집부터 크기는 사회적 이슈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의 여론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산단의 미래 모색

김관영 의원, 에너지신산업 특구 추진 토론회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특화 강소특구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9일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은 ‘새만금산단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전략 정책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산·새만금 일대의 강소특구 지정과 여기에 에너지 신산업을 연계해 군산·새만금뿐 아니라 나아가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부는 ‘강소특구’ 지정을 새로 도입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연구개발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

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이 신설됐고, 핵심기관과 지자체간의 협약체결을 의무화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고 기술과 산업정책 그리고 지역이 상호간 융합되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는 때에 열려 그 의미가 깊다.

특히,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 중심의 경제권으로 그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북과 군산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혁신의 가속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수단이라 볼 수 있는 강소특구를 통한 군산 지역산업과 새만금산단단지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지선 선대위 구성 완료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8일 당협위원장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전북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김형술 전 도당위원장(경을 고창 당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석삼 익산시를 당협위원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김용호 남원 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을 위촉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매진할 것이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경제와 균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지지 호소에 나서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